

일련번호	1	감사자	○○○○ ☆급 □□□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677,63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경 기 도 시정요구

제 목 가족돌봄휴가 등 복무 관리 부적정 및 국내여비 지급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국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부여받고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경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출장에 소요되는 일비, 식비, 운임, 숙박비 등을 국내여비로 지급하고 있다.

### 2.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sup>1)</sup>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

1) 제9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

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표 1] 가족돌봄휴가 사유 : “생략”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II-4-라-(6)에 따라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부서장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인사랑 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한다.

#### [표 2] 가족돌봄휴가 관련 증빙서류 : “생략”

따라서 가과 소속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휴가를 신청하고,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소속 공무원들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중 78건(20○○년~20○○)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감사 기간 중 휴가 사유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합하는지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9건은 관련 증빙서류가 없었고 6건은 ‘자녀 대입 실기고사’ 등 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1건은 한자녀로 유급휴가 가산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

#### [표 3]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현황 : “생략”

그 결과 가족 돌봄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가족돌봄휴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연가로 사용되어야 할 휴가가 유급 특별휴가로 부여되면서 6명(표3, 1~14번)에게 연가보상비 등 1,462,13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 3. 병가 사용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

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며,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8조 제7항에 따르면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중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증빙서류가 없다면 병가가 아닌 연가로 휴가를 사용하게 해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소속 직원 1명은 [표 4]와 같이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고, 감사 기간 중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연가로 사용되어야 할 휴가가 병가로 부여되면서 해당연도 연가보상비 92,35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 [표 4] 연 6일 초과 병가 사용 내역(진단서 미첨부) : “생략”

### 4. 여비 지급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sup>2)</sup>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및 「경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

---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르면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 등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정산 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 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정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출장자가 출장 후 운임 등 실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게 하고,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직원은 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여비를 지급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관외 출장이 취소되어 실제로 출장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지급하거나 실제 교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표 5]과 같이 총 4건에 대하여 123,15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 [표 5] 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 “생략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앞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여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가과장은

- 앞으로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와 여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와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7명에게 잘못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 1,554,480원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하여 4명에게 잘못 지급된 국내여비 123,15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표 3]의 가족돌봄휴가를 8시간 미만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A, B 총 2명에 대하여 2024년 연가일수에서 잘못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주의요구

제 목 ○○○○○○○ ○○·○○ ○○ 용역 감독(검사) 미흡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국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 ○○○ ○○·○○ ○○ 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1] 용역 추진 현황 :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제 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일부개정) 제14장 제2절 1. 가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 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계약상대자가 처음 계약조건과 같게 계약을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준공 시에는 이행 내용이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도에 제출·승인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 ○○·○○ ○○ 용역 제안요청서」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에 사업자는 투입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소속, 담당업무 등 인력에 대한 구성계획 및 수시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을 공문으로 경기도에 제출·승인 후 투입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가 [표 2]와 같이 착수계<sup>3)</sup> 산출내역서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을 7명으로 하여 투입량과 사업비를 제출하고, 준공계<sup>4)</sup> 산출내역서에는 투입인력을 5명으로 감소시키고, 1인당 투입량을 변경하여 사업비를 제출하였는데도 처음 계약과 다르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독하지 못하였고, 계약조건과 같게 준공되었다는 내용의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sup>5)</sup>하는 등 용역의 감독(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3) 주식회사 □□, 2021. 3. 18.)호, ○○○○○○ ○○·○○ ○○ 용역 사업 착수계 제출의 건

4) 주식회사 □□, 2021. 8. 31.)호, ○○○○○○ ○○·○○ ○○ 용역 사업 준공계 제출의 건

[표 2] 용역 투입인력 변경 현황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계약상대자로부터 참여 인원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계약조건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며, ○○ 관련 업무는 코로나19 현안 사업으로 긴박하게 추진되었고, 본 용역을 통해 각종 통계·정산 등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과장은**

- 앞으로 계약 업무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47,28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 (나담당관,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징계 ·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및 운영·관리 업무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나관 (나담당관), 경기도 가국 (가과)

징 계 대 상 자                가국 가과 ○급 A

징 계 종 류                경징계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국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이하 “공용차량관리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 출·퇴근에 이용한 공용차량 사적 사용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용 물품 등을 사적 사용한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소속 기관장은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 편람” (이하 “업무편람” 이라 한다) II. IV-4에 따르면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 이란 “정당



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 등을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 라고 되어 있으며, 그 예시 중 하나로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7조 제5항에 따라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6항에 따라 공용차량은 경기도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제2관리부서로 지정된 가과 직원들은 공용차량을 정해진 목적 외에 자신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출·퇴근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용차량 사용이 완료되면 차량을 청사 내 차고지에 두어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소속 A 등 ○명은 20\$\$\$. \$. \$\$\$.부터 20\$\$\$. \$\$\$. \$\$\$.까지 별지의 [별표 1] “공용차량 사적 사용 현황” 과 같이 공공입찰 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총 27회에 출장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고, 출장일 전날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퇴근한 후 다음 날 출장지로 갔다가 복귀하였고, 수원, 평택 등의 출장 업무를 마친 뒤 당일 18시까지 귀청이 어렵거나 18시 이후 사무실로 복귀 후 자택으로 대중교통을 이동하면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출장지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바로 퇴근한 후 다음날 청사로 출근하는 등 공용차량을 사적(출·퇴근)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용차량 운영·관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임차한 공용차량의 관리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용차량관리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 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 제8항에 따르면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정배차가 필요한 부서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용차량관리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제2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과는 [표 1]과 같이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 업무라는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을 임차하여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제2관리부서로 지정되었으므로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대장 및 차량 운행일지를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표 1] 임차한 공용차량 현황 : “생략”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부터 20\$\$\$. \$. \$\$\$., 감사일 현재까지 고정배차 차량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았고, 20\$\$\$. \$. \$\$\$.부터 20\$\$\$. \$\$\$. \$\$\$.까지 별지의 [별표 2] “운행일지 미작성 내역” 과 같이 총 30건의 차량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점검하지 않은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공용차량 운영·관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가팀(현 □□팀, 이하 생략) B은 20\$\$\$. \$. \$\$\$.부터 20\$\$\$. \$. \$\$\$.까지, C은 20\$\$\$.

\$\$\$. \$\$.부터 20\$\$\$. \$. \$\$\$.까지, D은 20\$\$\$. \$. \$\$\$.부터 20\$\$\$. \$. \$\$\$.까지, E는 20\$\$\$. \$. \$\$\$.부터 현재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20\$\$\$. \$. \$\$\$.부터 20\$\$\$. \$. \$\$\$.까지 가과의 공용차량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는 20\$\$\$. \$. \$\$\$.부터 20\$\$\$. \$. \$\$\$.까지 □□팀장으로 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팀 직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 [표 2]와 같이 임차한 공용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2] 임차한 공용차량 부당 사용 내역(2021. 5. ~ 2023. 12.) : “생략”**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 \$. \$\$\$.부터 20\$\$\$. \$\$\$. \$\$\$.까지 총 27일, 13회에 걸쳐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의 출장으로 공용차량을 출장일 전날 △△시 ○○ 소재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다음날 출장 후 복귀하거나, 출장 후 통근버스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없다는 이유로 공용차량을 자택으로 가져가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등 공용차량을 사적(출·퇴근)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임차한 공용차량 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행일지의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항 나” 및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A 팀장의 허락하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이유로 출장일 전날 □□시 소재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다음날 출장 후 복귀하거나, 출장 종료 후 퇴근시간대에 복귀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시 소재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등 20\$\$\$. \$\$\$. \$.부터 20\$\$\$. \$. \$.까지 총 16일, 8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출·퇴근)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C의 경우

위 사람은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20\$\$\$. \$\$\$. \$\$\$(월) 업체(용인 소재)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20\$\$\$. \$\$\$. \$\$\$(토)에 공용차량을 미리 ◇◇시 소재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출장 후 복귀하여 공용차량을 사적(출·퇴근)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라. D의 경우

위 사람은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20\$\$\$. \$\$\$. \$\$\$. 수원법원에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20\$\$\$. \$\$\$. \$\$\$.에 ☆☆시 소재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다음날 출장 후 복귀하여 공용차량을 사적(출·퇴근)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마. E의 경우

위 사람은 20\$\$\$. \$. \$\$\$. 경기도에 임용되어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였고, 출장 업무가 늦게 끝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출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담당 팀장의 허락하에 차량을 출장일 전날 ◎◎시 ▽▽구 소재 자택으로 가져가거나, 출장 후 자택으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출근에 사용하는 등 20\$\$\$. \$. \$\$\$.부터 20\$\$\$. \$. \$\$\$.까지 총 8일, 4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출·퇴근)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바. F의 경우

위 사람은 차량관리 담당자로서 공용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장을 감사일 현재까지 비치하지 않았고, 출장 후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였는지 등 공용차량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예산 절감 노력, 공용차량 차고지 당일 반납 등 공용차량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팀장으로서 경기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팀원들이 공용차량 수령을 위해 새벽에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출장 종료 후 늦은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피로도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북부청사 차량총괄부서인 C과에 문의하였고, 전용 차량은 팀장 책임하에 사적 사용 금지와 안전사고 예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

이에 배차 승인에 있어 “남부지역 거주자 집이 출장 동선과 겹쳐 추가 운행이나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이른 아침 남부지역 이상 장거리 출장이 예정되어 있거나, 장거리 운전이나 늦은 복귀로 인해 안전운전이 위협받거나 자택 복귀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에 한하여 전날 팀차량 수령 또는 다음날 차량 반납을 허용하였으며, “출장”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업무편람과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적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팀장으로부터 배차 승인을 받아서 공용차량을 출장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적 사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고, □□팀이 격무기피팀으로 선정되는 등 과중한 당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항

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법 사항을 알게 되었으니 향후에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 다. C, D, E, F의 경우

위 사람들은 앞으로 공용차량규칙을 엄수하여 잘 따르고 주의하겠으며, 공용차량의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처분 사항

-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여 사적 사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9조의2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예산 부당집행 금액의 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징계**)
- 임차한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여 사적 사용하고 공용차량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 예산 부당집행 금액이 미미하여 징계부가금은 면책하고자 합니다. (**훈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sup>6)</sup>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6)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사적 사용한 사항에 한함.

### 조치할 사항 가과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등 공용차량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사적 사용으로 확인된 A 등 ○명이 총 27회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통행료 113,290원, 유류비(전기차 포함) 133,990원 등 총 247,280원을 별지의 [별표 1]을 참조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1] 공용차량 사적 사용 현황 : “생략”

[별표 2] 운행일지 미작성 내역 : “생략”



# 재 심 의 결 정

제 목 경징계 의결 요구(공용차량 사적 사용에 관한 재심의 신청)

재심의신청인 가국

조 치 기 관 나국

관 련 인 다국 라과 □급 A

결 정 일 자 2024. 8. 20.

주 문 1. 관련인 A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훈계**」 요구로 변경하고,  
예산 부당집행 금액의 2배 징계부과금 부과, 「비송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이 건 원처분의 내용은 [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

## 2. 재심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 가. 신청취지

이 건의 신청취지는 관련인 A는 공용목적의 출장을 위하여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사적 사용이라는 감사 결과는 부당하다.

### 나. 신청이유

#### 1) 공용차량을 출장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적사용이라는 감사결과는 부당함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관련인이 조기 출장 또는 늦은 복귀 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차량을 수령 또는 반납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것으로 동기와 목적이 업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전날 늦은 출장 후 다음 날 관용차량을 반납할 경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조기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의 차량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자택으로 이동 시 최단 경로로 이동하였으며, 자택에 주차 이후 운행하지 않아 사적 사용은 없었다.

2)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이하 “규칙” 이라고 한다.)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현행 규정으로도 제2관리부서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처리 될 수 있었던 일로 판단됨

2021년 5월 이전에 별도 차고지 지정이 가능한지 묻는 관련인의 유선 질의에 공용 차량 총괄부서인 마과나 바과에서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제2관리부서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로 지정된 것이라면 제2관리부서로서 차고지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내역을 마과 등에 통보하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규칙을 잘 알지 못해 공용차량의 사적이용으로 지적된 것이므로 시정요구가 타당하다.

### 3. 재심의 판단

가. [신청이유 1] 공용차량을 출장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적사용이라는 감사결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인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된 13건의 공용차량 사용 건의 사실관계 등을 판단 하건데 사적사용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출장 후 귀가 교통수단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규칙 제17조 6항에는 공용차량은 경기도청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청사의 차고지 내에 두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량총괄(집중)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인은 재심의 신청서에 차량 총괄(집중관리) 부서에 별도 차고지 지정이 가능한지 유선질의 했고, 두 부서 모두 안된다고 답했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관련인은 별도 차고지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나. [신청이유 4] 규칙을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며, 현행 규정으로도 제2관리부서의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일로 판단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규칙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사업용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2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인은 제2관리부서로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지정된 것을 전제로 제2관리부서의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재심의 신청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경기도 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20.

경 기 도 지 사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다과 (나담당관, 다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다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나관 (나담당관), 경기도 가국 (다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다과(이하 “다과” 라 한다)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요청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5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따른 과태료부과 · 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7)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3항 제14호는 법 제62조 제3항 · 제5항 및 제8

7)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 제3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 **[표 1] 과태료 부과기준 : “생략”**

아울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sup>8)</sup> [별표 20]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가중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기준과 가중기준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 **[표 2]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가중기준 : “생략”**

따라서 다과는 경기도 소관 건설사업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20]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다과는 [표 3]과 같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요청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제5항을 위반한 4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33건의 부과 절차를 이행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sup>9)</sup>을 최장 4개월 23일이 지나서 납부하였는데도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5분의 1

8) 국토교통부훈령,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9)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이 추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동일 유형의 위반 건수가 3건 이상인데도 일부 건설사업자에게만 과태료부과 금액의 4분의 1을 가중하지 않는 등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가중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

### **[표 3]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부과·납부 현황 “생략”**

그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제5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과정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상실되어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다과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가중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자진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처분 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제5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자 합니다. (**훈계**)

## **조치할 사항 다과장은**

-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제5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제5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 이행시 동일 유형의 위반 건수 산정 등 과태료 감경·가중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2,53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시정요구

제 목 비상소집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연가 미전송 등 복무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 2. 읍지연습 응소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초과근무수당 등 7.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다. 지급제외 대상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제1호~제3호 비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비상소집에 응소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과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의 초과근무명령 사전·사후 신청 내용, 출·퇴근 인식 내용 및 초과근무 정산 내용 등을 확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았어야 하며, 본인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을지연습 비상소집에 따른 조기출근 시간은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표 1]과 같이 ◇◇◇◇☆급 ○○○은 비상소집일(2023. 8. 21.) 6시 57분에 출근인식을 하였고, 해당일 6시 57분부터 18시까지의 초과근무내역에 대하여 당시 서무 담당인 ◇◇◇◇★급 □□□이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다음 날인 2023년 8월 22일에 사후신청을 하여 ◇◇◇◇☆급 ○○○은 63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

[표 1] “을지연습 비상소집 응소자의 시간외근무 명세” “생략”

### 3. 복무관리시스템 연가 결재를 미전송하여 복무규정 미준수

####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10호(2022. 6. 17.)) VIII-3-나에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소속 공무원들은 휴가를 쓰고자 할 때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연가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II-3-나에 따라 휴가를 원하는 경우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급 ○○○○은 [표 3]과 같이 총 1건의 연가 사용에 대하여 복무관리시스템 결재를 미전송하고 부서장의 승인 없이 2시간 연가(조퇴)를 사용하였다.

#### [표 3] “복무시스템 연가 미전송 명세” “생략”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은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하고자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연가계획을 작성 후 저장하였고, 결재 상신하였으나 결재완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귀가했는데 복무시스템 결재 상태가 미전송되었다는 사실을 금번 감사시에 알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결재미전송’은 결재신청 등록 단계에서 저장만 등록한 상태이므로 부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결재상신을 하였어야 했다.

또한, 급한 용무로 집에 서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커서 결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했으나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준수사항이므로 위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치할 사항 가과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에 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에게 [별표]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액 12,53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결재를 미전송하고 사용한 ○○○○의 연가 2시간에 대

하여 2024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586,36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시정요구

제 목 가족돌봄휴가 등 복무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 등에 따라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를 부여 받고 근무상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 2.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sup>10)</sup>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sup>11)</sup>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가족돌봄휴가 사유 “생략”

1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9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

11)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II-4-라-(6)에 따라 유급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부서장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인사랑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첨부하여야 하고,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표 2] 가족돌봄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 “생략”**

한편, 복무예규 VIII-4-라-(6)에 따르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VIII-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를 보면 휴가일수의 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소속 공무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휴가를 신청하고,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소속 공무원들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2021년~2023년)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74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표 3]과 같이 1건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었고, 2건은 [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아닌 ‘수시면접, 가사,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4명이 6건의 유급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였고, 1건은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3시간 무급으로 신청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에만 사용되어야 할 특별휴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고, 연가로 사용되어야 할 휴가가 유급 특별휴가로 부여되면서 [표 3]의 5명에게 연가보상비 등 총 586,36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 **[표 3] 가족돌봄휴가 부적정 사용 현황 “생략”**

### 3. 관련자 주장 및 판단

#### 가. ○○○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한 것은 본인의 직급이 ‘□□□□□□□□□□(◎◎시간)’ 이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주당근무시간 및 휴가 단위가 시간으로 되어 이를 반영하여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복무예규 Ⅷ-4-라-(6)에는 무급 가족돌봄휴가의 일 단위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단서조항 등이 없으며, 행정안전부 인사제도와 질의 결과 및 복무예규 Ⅷ-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규정 또한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고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써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는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전혀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라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한 일 정규 근무시간(7시간)에 일 단위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근무 편의를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한 근무일(3시간)에는 조퇴 등 다른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 나. ◎◎◎ · □□□

◎◎◎은 실제 방문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었기에 구글 타임라인(스마트 폰 위치추적앱)을 제출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는 복무예규에 따라 부서장이 특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거나 예규에 명시된 적합한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다른 휴가를 사용해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는 2022년 5월 9일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전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며, 2021. 11. 19., 2021. 12. 21. 모두 자녀 또는 배우자를 돌보는데 사용한 바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2022년 5월 9일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전 가족돌봄휴가 증빙자료 미첨부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2021년 3월 17일에 총무과에서 전 실·국에 송부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알림 공문<sup>12)</sup>을 보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유급휴가 증빙자료는 가족돌봄휴가 사유의 안내문, 문자메시지, 메일, 병원 영수증 등을 휴가 결재시 붙임파일로 첨부하거나 사후에 서무담당자에게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개편 이전에도 결재 재기안 등을 통한 사후 첨부가 가능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1. 11. 19., 2021. 12. 21. 모두 자녀 또는 배우자를 돌보는데 사용되었다는 주장 중에

① 2021. 11. 19. ‘수시면접’ : 배우자가 ●째 자녀와 함께 대입(수시)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21. 11. 19. 포항으로 이동해야 함에 따라 ●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첫째, ‘수시면접’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휴가 사유를 정정하거나 수정결재를 하였어야 했고,

둘째,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그 외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 인사제도와 질의 결과 가족돌봄휴가는 연가가 아닌 특별휴가이므로 휴가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가)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는 그에 준하는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등’을 확대 해석해서 남용하지 말아야

12) 총무과-7672(2021. 3. 17.)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알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2021. 12. 21. ‘자녀 대학진학 상담’ : ●째 자녀를 배우자가 돌보던 중 2021. 12. 21. 배우자가 예약한 진로상담 및 병원진료(배우자 돌봄)와 그로 인한 ●째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은

첫째, ‘자녀 대학진학 상담’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아닌 휴가 사용자 본인이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에만 해당되고,

둘째,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그 외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셋째,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자동차 사고접수 내역 및 배우자 진료 기록 소명자료 제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조치할 사항 가과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복무 관리와 교육을 시행하고 가족돌봄휴가에 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 등 ◇명에게 잘못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 총 586,3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표 3]의 8시간 미만 가족돌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 ■■■■ 총 2건에 대하여 2024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는 등 근무상황부를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아래 참조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징계 · 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 ○○○○ ○○○ ○○○○ 사업” 부적격자 선정 등 사업추진 부당
소관기관(부서)	① 경기도 가국 나과 ② 가시 다센터 라과
조치기관(부서)	① 경기도 나관 나담당관, ② 가시 바관
징 계 대 상 자	① 경기도 가국 나과 ◆급 A ② 가시 다센터 라과 ●급 B
징 계 종 류	①, ② 경징계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국 나과(이하 “도 나과”라 한다)와 가시 다센터 라과(이하 “시 라과”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구 「경기도 ○○○○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4. 3. 30. 경기도 조례 제79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 ○○○○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나과는 시·군에서 선정·추천한 지방보조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시·군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 라과는 도 나과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추천하고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시비를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 및 사업 진행,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산, 사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위 부서들은 당시 위 법령 등에 따라 별지의 [별표 1] “○○○○○ ○○○○ ○○○○



○○○ 내역” 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 2. “○○○○○ ○○○○ ○○○ ○○○ 사업” 부적격사업자 선정 등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 ○○○○ ○○○ ○○○ 사업 지침」(이하 “사업 지침” 이라 한다) II-2, 4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이어야 하고, 자격 및 요건 중 ○○○ 토지 소유권이 사업 대상자와 일치하거나 10년 이상 임대 가능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시장·군수는 공모 또는 내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 토지 확보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편, 기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은 시·군에서 선정한 사업자를 도가 단순히 보고 받는 형식이었으나 도 나과는 “○○○○○ ○○○○ ○○○ ○○○ 사업” (이하 “○○○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표 1]과 같이 시·군에서 선정·추천한 지방보조사업자를 도에서 직접 자격의 적정성 등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표 1] ○○○○○○ ○○○○ ○○○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생략”

따라서 시 라과는 ○○○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시한 ○○○ 토지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의 소유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추천하여야 하며, 도 나과는 시·군에서 선정·추천한 지방보조사업자 자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확인한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 라과는 2021. 2. 26. ○○○ 사업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추천하면서 (주)○○○○○○(대표자: △△△)이 법인 소유라고 신청한 ○○○ 토지(가시 ◇◇면 ◆◆리 ●●●가 [표 2]와 같이 (주)○○○○○○ 소유가 아니고 개인인 △△△의 소유인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모 또는 내부 검토 과정 등을 거

치지 않고 선정·추천하여 부적격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도 나과 역시 제출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격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주)○○○○을 사업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시 라과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에 부지확보 방안 증빙서류로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도 나과는 증빙서류가 빠져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하지 않았다.

**[표 2] (주)○○○○ 사업 예정지(토지) 등기사항 : “생략”**

그 결과 위 부서들은 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한 (주)○○○○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 사업의 정산 처리 부적정 등**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요재산의 관리 내역 등이 있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sup>13)</sup>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서식으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보고서(이하 “검증 관련 보고서”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도 나과는 ○○○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받을 때는 시 라과에 지방보조금 법령에서 정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검증 관련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을 한 감사반

시 라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 누락 된 서류가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 라과도 정산 결과 제출 시 누락 된 서류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 라과는 도 나과에서 “○○○○ ○○○○ ○○○○ ○○사업 정산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하여 ○○○○ ○○○ ○○○○ 사업 관리대장, 개설지원 완료보고서, 사업 정산 서식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문 요구 사항과 달리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발생이자 산정내역 및 이호조 증빙’ 만을 제출하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도 나과는 정산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총액<sup>14)</sup>이 3억 원 이상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 라과가 공문 서식에 맞춰 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 요구 조차하지 않아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중요재산의 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등 사업 지침 미준수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 사업 지침 II. 4. 사업추진체계 및 시행요령 및 IV. 1. ○○○ 운영관리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규모 변경 등)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승인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지원 대상자는 시설물 운영 시 경기도 ○○○○ 기본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지원시설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의 납품 현황과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반기별 수립·시행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 라과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의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

14) (주)○○○○○ 지방보조금 총액 340백만 원(도비 102백만 원, 시비 238백만 원)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 신청을 안내하여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그 승인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주)○○○○에 대한 지도·감독 및 매장의 납품 현황과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반기별로 수립·시행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주)○○○○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 없이 당초 제출한 ‘2021년 ○○○○ ○○○ 건립지원 사업계획서’ 상의 ○○○의 준공 및 개장일(2021. 8.)과 다르게 2021. 12. 임시 개장을 하고, 2022. 3. 2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시 라과는 이에 대한 변경 계획 안내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시 라과는 2021. 7. 12. 당초 ‘농가 카페 및 사무실’로 계획된 2층 부분 ‘휴게실, 체험실, 사무실’로 변경 승인 후 경기도에 보고<sup>15)</sup>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이 제대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아 [그림]과 같이 (주)○○○○이 승인받은 변경 계획과 다른 용도인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2022. 4. 4. ○○○○ 매장 점검 시 알게 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2024. 3. 11., 이하생략)까지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그 결과 ○○○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그림] (주)○○○○ 현장 사진 : “생략”

### 5.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지연 등 사후 관리 부당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서 부동산과 종물 등에 대한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15) 가시 라과-18425(2021. 7. 12.)호 「○○○○○ ○○○○ ○○○ 개설 지원 사업대상자 사업계획 변경보고」  
변경 전: 2층(농가 카페 및 사무실), 변경 후: 2층(휴게실, 체험실, 사무실)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 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 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3항 및 관리기준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 현황을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 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표 3]과 같은 사항을 표기 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 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표 3] 부기등기 표기 내용 : “생략”**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12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법(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 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 라과는 ○○○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인 (주)○○○○이 [표 4]와 같이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와 함께 부기등기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으로부터 취득 현황 및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보고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 받은 날부터 관리 기준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을 가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표 4] (주)○○○○의 취득한 중요재산(건축물) 현황 : “생략”**

또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한 행위 등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환수,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 라과는 (주)○○○○이 중요재산의 취득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및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중요재산에 대한 변동 현황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가시 홈페이지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한, 2021. 3. 30. (주)○○○○에 “○○○○○ ○○○○ ○○○ 개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면서 부기등기를 필수적으로 이행할 것을 안내하였고, 2022. 2. 3. 사업을 완료·정산하였다.

그 후 2022. 3. 30. (주)○○○○○ ○○○ 건물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시  
라과는 부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22. 4. 5. (주)○○○○○에 “도비  
보조사업장 부기등기 완료 요청”을 최초 통보하였고, (주)○○○○○이 부기등기를 실  
시하지 않자 2022. 8. 3. 및 2023. 2. 28. 독촉 공문만 발송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  
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  
아무런 행정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주)○○○○○이 ○○○의 소유권보존을 등기한 2022. 3. 30.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3. 6.에 이르러서야 [표 5]와 같이 부기등기가 완료되었다.

#### [표 5] (주)○○○○○ ○○○(건물) 등기사항 : “생략”

또한, 시 라과는 2023. 2. 28. 3차 부기등기 독촉 문서를 보낼 당시 (주)○○○○○ ○○  
○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거나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반환 등의 조치를 하  
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후 2024.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발송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실조  
회서가 가시에 접수되고 나서야 (주)○○○○○ ○○○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신  
청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때 서야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반환, 지방보조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중요재산을 보전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담보권 실행에 따른 절차로 인하여 중요재산을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금 환수 조치가 불투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 6.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도 나과 □팀 A는 2020. 3. 25.부터 2022. 2. 13.까지 ○○○ 사업 업무를 담당하였  
고, C는 2020. 7. 23.부터 2023. 7. 27.까지 □팀장으로 ○○○ 사업 업무를 관리하였  
다.

시 라과 ●팀 D는 2020. 10. 12.부터 2021. 3. 8.까지 ○○○ 사업 업무 중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도 나과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는 2020. 10. 12.부터 2021. 7. 5.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 사업을 관리하였다.

시 라과 ◇팀 F는 2021. 8. 13.부터 2022. 2. 16.까지 ○○○ 사업 업무 중 사업관리 및 지방보조금 교부,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팀 G는 2022. 2. 17.부터 2022. 12. 31.까지 ○○○ 사업 업무 중 ○○○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시 라과 B는 2021. 7. 5.부터 현재까지 ◇팀장으로 ○○○ 사업 업무를 관리하였고, L은 2022. 1. 1.부터 2022. 8. 4.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라과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사람들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 [표 6]과 같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표 6] ○○○○ ○○○ 사업 업무 부당 처리 내역 “생략”

##### 가. A, C의 경우

###### 1) ○○○ 사업의 부적격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A은 사업 지침을 직접 작성하였고, C는 A의 직근 상급자 및 ○○○ 사업의 업무 관리자로서 지침상 중요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2항 나”와 같이 자격요건에 미달한 (주)○○○○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최종 확정하였고, 증빙서류인 토지 등기부등본이 누락 되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 라과에 보완조치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 사업의 정산 처리 부적정

A는 “3항 나”와 같이 ○○○ 사업 정산 당시 지방보조금법에서 정한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정산보고서의 검증 대상인지도 파악하지 않아 관련 자료를 시 라과에 요청하지 않았으며, C 또한 담당자인 A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D, E의 경우



### 1) ○○○ 사업의 부적격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원인 제공

D는 “2항 나”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공모나 내부 검토 절차 없이 자격요건에 미달한 (주)○○○○을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제출하였고, 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E는 D가 기안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문서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결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F, B, L의 경우

#### 1)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등 사업 지침 미준수

F는 (주)○○○○의 준공이 당초 2021년 8월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도 “4항 나”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B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F의 보고를 통해 (주)○○○○의 준공과 개장이 늦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거나 F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지시하지 않아 업무 관리자로서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 사업의 정산 처리 소홀

F는 “3항 나”와 같이 2021년 ○○○ 사업 정산 당시 도 나과에서 제출 요구한 정산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정산 결과를 제출하였다.

B와 L은 F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보완을 지시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라. G, B, L의 경우

#### 1)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등 사업 지침 미준수

G는 2022. 7. 22. ○○○○ 매장 점검 시 (주)○○○○○ 2층이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이를 보고하였음에도 사업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반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 매장의 납품 현황과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B는 2022. 4. 4. 출장 당시 “4항 나”와 같이 (주)○○○○○ 2층의 용도가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였고, 2022. 7. 22. G가 기안한 출장복명서에 결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2022. 12. 13. 출장 때까지도 2층이 카페로 사용 중인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B는 ○○소 ▲팀에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주)○○○○○의 진술과 원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는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사업계획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반기별로 실시해야 하는 ○○○○ 매장의 납품 현황과 운영 활성화 계획수립·시행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 관리자로서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L 또한 시 라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항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지연 등 사후관리 부당

G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2022. 4. 5. (주)○○○○○에 부기등기 요청 문서를 보낼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후 부기등기 요청 문서만 총 2회만 보내고 “제5항 나”와 같이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B는 중요재산의 의미와 그 부기등기 시기<sup>16)</sup>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부기등기는 지방보조사업자의 협조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주)○○○○○의 부기등기 지연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23. 2. 28.경 당시 담당자 I로부터 (주)○○○○○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5항 나”와 같이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24.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사실조회서가 가시에 접수되고 나서야 건물 등기부등본을 처음 확인한 후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6) 문답 시 부기등기는 언제 하게 되어 있냐는 질문에 소유권 등기할 때 부기등기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B가 답변했음.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변동 현황 보고와 보고 받은 현황에 대해 가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담당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주)○○○○○○ ○○○ 변동 현황 등을 보고받지 않고 홈페이지 공시하지 않아 업무관리자로서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5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7.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자 및 관련 부서는 이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업무 연찬의 부족과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과 사업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 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도 나과 A, 시 라과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처분 사항

- “○○○○○○ ○○○○ ○○○ ○○○○ 사업” 당시 부적격한 지방보조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자 합니다. (징계)
- ○○○○○○ ○○○○ ○○○ ○○○○ 사업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자 합니다. (훈계)

## 조치할 사항 가시장은

- 「○○○○○○ ○○○○ ○○○ 개설지원 사업 지침」을 미준수 등 사업관리를 부당하게 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고발과 반환 등 조치 미실시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 ○○○○ ○○○ 개설지원 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가시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 시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연찬 후 업무를 추진하시고 “○○○○○○○ ○○○○ ○○○ 개설지원 사업”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 (나담당관,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징 계 · 훈 계 · 시 정 요 구 및 통 보

제 목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등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가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나관 (나담당관), 경기도 가국 (가과)

징 계 대 상 자        가국 나과 □팀 ○급 A

징 계 종 류            경징계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국 가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이하 “사무위탁 조례” 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경기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 조례” 라 한다) 등에 따라 경기도□□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조례에 따라 20△△. △. △△. 사단법인 경기도○○(이하 “운영법인” 이라 한다)와 「경기도 □□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이하 “위·수탁계약서” 라 한다)를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 2. 시설장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미준수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9조에 따른 미성년자,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자 등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이하 “지침” 이라 한다) II.-2.-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운영법인이 □□시설의 시설장을 채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한 후 임용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운영법인은 □□시설 시설장의 계약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 △. △△.부터 △△. △△.까지 채용 공고 및 심사 등을 통해 현 시설장의 재채용을 결정하고, 20△△. △△. △△. 가과에 “□□시설 시설장의 채용 결과<sup>17)</sup>” 를 보고하였다.

가과는 위 채용 결과를 검토하면서 시설장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이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영법인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내부 결재를 통해 20△△. △△. △△.(임용일) 운영법인에서 제출한 그대로 시설장을 임용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시설 시설장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미준수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복지시설 인사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시설 예산회계 운영 관리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

17) 경기도○○ 20△△-■■■■(20△△. △△. △△.)

고,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운영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계 관리는 재무·회계 규칙과 당해 연도 경기도의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전용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이하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이라 한다) III.-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8조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면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 □□시설 「재무·회계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운영법인에서 예산의 전용을 신청한 경우 관계법령과 위·수탁계약서, 경기도 예산편성지침 등이 정하고 있는 예산 전용의 가능여부 및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의 계약체결 등 회계 운영이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교부한 보조금(민간보조예산) 중 종사자 인건비를 시설·단체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전용에 관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동 법을 따라야 하고 법에서 인건비를 전용 제외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부내역에 인건비로 명시하여 교부한 경우 전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sup>18)</sup>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20△△. △. △. □□시설에서 [표 1]과 같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감액하고 시설비(자산취득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 전용을 신청하였는데도 20△△. △△. △. □□시설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및 예산집행을 사유로 불가능한 예산 전용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 [표 1] □□시설 예산 전용 세부 명세(20△△. △△월) “생략”

또한, 가과는 □□시설이 전용한 예산으로 20△△년 준공 예정인 □□시설 사옥 입주를 위한 ■■ 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 2]와 같이 20△△. △△. △△. ○○시설인 (주)◇◇협회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당일 대금을 지급한 후 감사일 현재(2024. 3. 11. 이하 생략)까지 물품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 [표 2] □□시설 사옥 입주 관련 계약 및 지출 명세 “생략”

그 결과 가과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선수금 운영 부적정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0△△. △. △△.)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등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계약의 이행 제3항 물품계약의 이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와 □□시설 「재무·회계 규정」 제36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을 전시·판매하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 구매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에 구매 대금을 받아야 하므로, 가과는 □□시설에서 재무·회계 운영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설은 20△△. △△. △△.<sup>19)</sup>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구매처로부터 판매 대금을 선결제 받은 후 구매처가 요청할 때 ○○○ □□시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인도하는 이른바 ‘선수금 제도’를 관행적으로 [표 3]과 같이 지속해 왔다.

#### [표 3] 선결제 운영현황(20△△. △△. △△. ~ 20△△. △△. △△.) : “생략”

20△△. △△. △부터 선수금 제도를 중단하고 선결제를 받지 않고 있으나 [표 4]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도 선결제 받은 약 1억 6,900만 원의 선수금이 처리되지 않고

19) 시작 시기는 확인되지 않으나 20△△. △. △. ~ 20△△. △. △.까지 2,294,687천 원 선수금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남아 있었다.

#### [표 4] 남은 선수금 “생략”

또한, □□시설은 선결제 받은 금액을 내부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내부 결재도 없이 직원 개인별로 작성한 엑셀 파일과 보관증만으로 관리해 왔고, 그마저도 엑셀 데이터와 보관증의 불일치, 보관증 분실, 확인서명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그런데 가과는 매년 □□시설의 위탁사무 운영을 지도·점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 △△. △.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시설의 선수금 제도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도의회 및 언론에 지적되는 등도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대해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 5.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나팀 A는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B는 20△△.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나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가. 시설장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미준수

위 사람들은 현 시설장의 임기가 20△△년 △△월로 같은 해 △월 무렵부터 운영법인 C사무국장으로부터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아 왔었고, 20△△. △△. △. “2항 나”와 같이 채용 결과를 보고 받았으므로 운영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였는지, 시설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운영법인이 보고한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2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시설 예산회계 운영 관리 부적정

위 사람들은 □□시설이 사업비를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위탁기관으로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3항 나”와 같이 □□시설의 인건비 예산 전용 신청을 부적정하게 승인하고, □□시설이 승인된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제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3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다. 선수금 운영 부적정

A은 20△△년 △월경 도 의회에서 결산분석자료 요청 시 □□시설의 재무재표를 제출받아 선수금 운영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시설에서 선수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지 등 담당자로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B는 20△△년 △월 결산을 통해 □□시설의 선수금 운영 사실을 인지하였고, 남부센터 현장에서 직접 선수금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0△△. △.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까지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그 결과 “4항 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6. 관련자(관련기관) 주장 및 판단

#### 가. 시설장 임용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미준수 관련

가과는 채용 전 재직 중이었던 현재 시설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을 위한 범죄 전력 여부를 연 1회 확인해 왔고, 임용 후 결격사유 조회 절차가 지연됐지만 추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년 □□시설 사업안내」 제4장-1.-7.-라. 및 제5장-1.-9.-다.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운영·취업 전에는 범죄 전력조치를, 운영·취업 후에는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2023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 의무 안내(Q&A사례집)’에 따르면 최초 채용할 당시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법인 정관에 따른 법인이사회 의결 등 내부 인사규정을 통해 재계약, 재임용, 재취업, 인사발령 등 신분관계 변동 시 반드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해당 시설을 총괄하는 자로서 결격사유 등을 더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시설 예산회계 운영 관리·감독 부적정 관련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2, 제16조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시설의 장은 관·항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처리는 지방재정법(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이 아닌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설은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어야 하는 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은 재무·회계 규칙보다 상위법이라는 점, 보건복지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가과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선수금 운영 부적정 관련

가과는 20△△년 △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설의 선수금이 표면화 된 후 20△△년 △월과 20△△년 △△월에 □□시설 ○○센터와 ○○센터를 각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과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20△△년 △월 도의회에서 지적이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년 △△월 이전까지 개선 조치도 없었고 □□시설이 20△△년 △△월 말까지 계속해서 선수금을 운영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가과는 선수금의 회계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행정시스템이 미비하고 선수금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엑셀 파일과 보관증 등의 수기형태로 관리해 왔으나 선수금 회계부정이나 회계관련 부정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설이 작성한 선수금 관련 엑셀 파일과 보관증을 확인한 결과 “4항 나”와 같이 선수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회계관련 부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요구 양정** 민간위탁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처분 사항

- 경기도 □□시설 민간위탁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자 합니다. (징계)
- 경기도 □□□□시설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자 합니다. (훈계)

## 조치할 사항 가과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수탁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경기도 □□시설에서 관리했던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경기도□□시설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 검토 및 예산회계(계약), 선수금 운영 부적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 검토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9	감사자	지방시설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국 나과 (나담당관,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 ○○○○선형개선공사 관급자재 관리 · 감독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나관 (나담당관), 경기도 가국 (나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가국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도로건설공사 공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 ○○○○선형개선공사(이하 “선형개선공사” 라 한다)’ 를 시행하고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공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과는 [표 1]과 같이 2018. 5. 25.에 □□ 외 2개사와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 외 2개사와 2018. 10. 30.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형개선공사의 사업기간은 2018. 11. 1. ~ 2024. 3. 27.이다.

[표 1] ○○○○○ ○○○○선형개선공사 현황 “생략”

### 2. 관급자재 관리·감독 소홀 및 자재 검수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sup>20)</sup> 및 공사관리관<sup>21)</sup>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sup>22)</sup>·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sup>23)</sup>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8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78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현황,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 통보 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sup>24)</sup>(KCS 14 31 00)」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에 대한 재료의 밀 시트(강재 검사증

20)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2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발주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

2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제17호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공사관리관,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23)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요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24)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는 ‘국토부고시 제2019-244호(2019.5.20.)’로 고시됨



명서<sup>25)</sup>) 및 입고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하며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철근 자재가 반입될 시 송장 및 밀 시트, 입고명세서 등으로 수량, 치수, 재료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나과는 공사관리관으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처에 제출하는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수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표 2]와 같이 2019. 11. 7.에 납품 요구한 선형개선공사의 관급자재인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이하 “철근”이라 한다) SD400<sup>26)</sup> 35.107톤 중 2019. 11. 27.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대리인이 26.208톤을 납품 받으면서 [그림 1]과 같이 승인된 자재공급원인 ●●이 아닌 ◇◇의 송장<sup>27)</sup>을 첨부하여 자재 검수를 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9. 12. 19.에 철근 35.107톤에 대한 자재대금 24,023,556원 전액을 ●●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 [표 2] 관급자재(철근) 구입 및 검수 현황 “생략”

#### [그림 1] 납품요구서 및 송장 “생략”

그리고 나과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2019. 12. 11.에 3번에 나뉘어 납품된 철근

25) mill sheet:: 강재의 납품 시 첨부하는 품질보증서로 제조번호, 강재번호,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 등을 기록하여 놓은 것으로 강재 검사증명서라고도 함

26) Steel Deformed Bar, 설계기준 항복강도 400MPa

27) 판매자가 자재 관련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는 의미로 구매자에게 보내는 거래내역서로 송장번호, 공급자, 인수자,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포함

SD400 77.444톤을 검수하면서 전체 물량에 대한 밀 시트를 제출받고 자재 검수를 하여야 했는데 [그림 2]와 같이 24.456톤에 대한 밀 시트만 제출받고 검수 결과를 시공사에 ‘적정’하다고 통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건설사업관리인은 누락된 52.988톤에 대한 밀 시트 재발급을 철근 납품사에 요청하여 뒤늦게 나과에 제출하였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1. 7. 14.에 납품된 철근 SD500 7.063톤 검수시에도 해당 물량 이상의 밀 시트가 제출되어야 했는데도 4.032톤에 대한 밀 시트를 제출받아 검수 결과를 ‘적정’하다고 시공사에 통보하는 등 자재 검수 업무를 여러 차례 소홀히 하였고 나과는 이에 대해 조치 요구나 지도·점검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를 수감하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잘못 첨부되었던 밀 시트를 뒤늦게 교체하여 나과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그림 2] 밀 시트(검사증명서) 중량 불일치 현황 “생략”**

그 결과, 관급자재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확인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채 철근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철근 구입시 필수적으로 제출받아야 하는 밀 시트의 누락으로 적정 품질 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철근을 반입하여 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시행 확인 등 품질관리업무 소홀**

###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등은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 등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5호 가목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별점(2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제1항 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은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별 50톤마다 화학성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의 품질시험종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업무수행지침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과는 승인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지도·감독 이행 등이 부적정하여 품질시험 등 일부가 누락 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고 품질시험계획서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표 3]의 품질시험계획서와 같이 사업장에 납품되는 철근 13종에 대하여 화학성분과 기계적성질(항복강도<sup>28)</sup>, 인장강도<sup>29)</sup>, 연신율<sup>30)</sup>, 굽힘성<sup>31)</sup> 등)에 대한 시험을 각각 25회 실시하도록 계획하여 승인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표 4]와 같이

28) 영구 변형이 지정 값에 달했을 때의 응력 한계

29) 극한 강도, 재료가 절단되도록 끌어당겼을 때 견뎌내는 최대 하중을 재료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

30) 인장시험 시 재료가 늘어나는 비율

31) 균열을 일으키는 일 없이 굽힐 수 있는 정도

화학성분 22회, 기계적성질 21회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각각 3회, 4회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부족한 품질시험에 대하여 추가 시행하는 등 조치 요구를 하지 않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이행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나과는 승인한 품질시험계획 미준수로 자재 반입시 등 적정한 시기에 시행하여야 하는 품질시험을 누락한 채 공사를 준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관급자재(철근)의 품질시험계획서 “생략”**

**[표 4] 관급자재(철근)의 품질시험 실시 현황 “생략”**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자재 검수, 품질시험계획 등 적정 이행 여부 등에 건설사업관리단 지도·점검 등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철근의 검사증명서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증명서 재발급, 품질시험 시행 결과 등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서 품질 확보에는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였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품질시험 이행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별점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 처분사항

- 자재 검수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급자재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치 등을 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자 합니다. (**훈계**)

### 조치할 사항 가국 나과장은

-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재 검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승인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등 공사의 품질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일부를 누락한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0	감사자	지방시설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국 나과 (나담당관,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하천점용 협의 조건 미준수 및 하천구역 내 영구시설물 설치  
부적정 등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나관 (나담당관), 경기도 가국 (나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가국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도로건설공사 공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 ○○○○선형개선공사(이하 “선형개선공사” 라 한다)’를 시행하고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시공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과는 [표 1]과 같이 2018. 5. 25.에 □□ 외 2개사와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 외 2개사와 2018. 10. 30.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형개선공사의 사업기간은 2018. 11. 1. ~ 2024. 3. 27.이다.

[표 1] ○○○○○ ○○○○선형개선공사 현황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의 업무 범위에는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이 포함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이라 한다)」 제12조제1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sup>32)</sup> 및 공사관리관<sup>33)</sup>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를 해결하고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 사항 발생시 발주청으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보고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르면 설계변경<sup>34)</sup>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지침 제67조 제15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 ○○○○ 선형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5. 세부수행 업무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3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3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발주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의 소속 직원

34)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이 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95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나과는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지방도 391호선 ○○○○ ○○○○ 선형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이하 “■■지방국토관리청”이라 한다)과 하천구역 임시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확인 및 법면 유실 방지를 위한 식생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나과는 선형개선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득한 임시 하천점용 협의 조건 등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영구 하천점용 등이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했다.

그리고 선형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나과에서 득한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했으며 나과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설계변경 관련 실정보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 등과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하천구역과 인접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경계 등을 확인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요구하여야 했으며 실정보고 승인 이후 시급한 사유로 우선 시공을 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했다.

#### **[그림 1] 하천구역 편입조서 및 점용대상지 “생략”**



## [그림 2] 하천점용허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생략”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2020. 9. 18.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표 2]와 [그림 3]과 같이 도로 종점부(STA. 1+040 ~ 1+100)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가평군 △△리 ▮▮▮-◎번지(이하 “△△리 ▮▮▮-◎번지”라 한다) 일원에 교통 우회도로 선형변경 등을 반영하여 RC옹벽의 규모와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제출받았는데 당초 ▮▮ 지방국토관리청에 임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 준공 후 하천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확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하고도 하천 구역에 영구시설물인 RC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2020. 9. 25.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과 같이 타당’하다고 승인하면서 변경사업비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기로 하였고, 시공사는 실정보고 승인된 대로 2020. 10월경 공사를 시행하였다.

#### [표 2] 관련 실정보고(2020. 9. 25.) 내용 및 검토 의견 “생략”

#### [그림 3] RC옹벽 변경 계획 도면 (2020. 9. 25. 실정보고 승인시) “생략”

또한, 나과는 그 이후 2020. 11. 12., 2021. 12. 21., 2023. 8.24.에 3회의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RC옹벽 설치에 대하여 2020. 9. 25. 승인한 실정보고 건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금액의 조정은 되지 않았다.

하천구역 내 RC옹벽이 설치된 이후, 나과는 2021. 8. 10.에 도로 종점부 RC옹벽 옆 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 건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보도설치 요청구간이 하천구역으로 추정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해 확인 요청을 하였고 2020. 9. 25.에 실정보고 승인으로 RC옹벽이 변경 설치된 △△리 ▮▮▮-◎번지 일원이 하천구역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과는 당초 협의하였던 하천점용허가 조건과 부합하지 않게 설치된 RC옹벽과 관련하여 [표 3]과 같이 여러 차례 관리청인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였

으나 2023. 3. 20.에 최종적으로 ■■지방환경청은 하천구역 내 RC옹벽은 영구시설물로 존치 불가하므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표 4]와 같이 2023. 6. 29.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방환경청의 최종 협의 의견에 따라 설치된 RC옹벽을 철거하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나과는 2023. 6. 30.에 이를 승인하였으며, [그림 4]와 같이 2024. 1월경 RC옹벽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다.

**[표 3] 하천구역 내 영구시설물(RC옹벽) 관련 협의 현황 “생략”**

**[표 4] 관련 실정보고(2023. 6. 30.) 내용 및 검토 의견 “생략”**

**[그림 4] 영구 시설물(RC옹벽)의 원상복구 “생략”**

그 결과, 나과는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등에 관한 하천법의 지정 취지를 지키지 않고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 경기도 행정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현장 여건을 인지하지 못한 실정보고 승인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선형개선공사의 최종 공사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사가 설계도 횡단면도 상 하천 경계 등을 잘못 판단하고 도로구역결정(변경) 협의 내용 및 하천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하천구역 내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실정보고하였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당시 RC옹벽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폭·종단계획고 단차·분선 옹벽 터파기 저축 등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면 교통우회를 위한 가도계획 변경은 불가피하여 가시설 등 대체시설 설치의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비 증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최종적으로 하천관리청인 ■■환경청과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이 원상복구되도록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업무 및 실정보고 적정성에 대한 검토·승인은 공사관리관의 업무로 나과는 인·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확인하여야 했고 현장여

건과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지시하여 이를 토대로 공사내용의 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처분사항

- 하천구역 내 영구하천점용을 받지 않고 영구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사업내용 변경에 관한 실정보고를 검토·승인하는 등 공사관리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고자 합니다. (**훈계**)

### 조치할 사항 가국 나과장은

- 앞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시 협의된 관계기관의 의견이 미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변경 관련 실정보고 승인시 현장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공사관리관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의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의 업무와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 확인에 대한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 ○○○○ 선형개선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그 부실 정도를 판단하여 벌점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센터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주의요구

제 목 전기공사 발주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센터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가센터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센터(이하 “가센터”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와 같이 전기공사가 포함된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전기공사가 포함된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명세 “생략”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2019. 10. 24. 법률 제16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르면 전력부하설비공사(조명설비, 콘센트 등 기계·기구 및 동력설비의 공사)는 전기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꽂음접속기(플러그), 소켓, 전구류 등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등 경미한 전기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센터는 전기공사 발주시 경미한 전기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센터는 [표]와 같이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였고, 해당 전기공사는 조명설비, 콘센트 등을 단순 교체가 아닌 배선 작업을 통해 신규로 설치하는 공정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해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나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하지 않음으로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성을 우려할 수 있으며,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센터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유사한 공사 계약 체결 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적합한 전문 면허를 갖춘 자와 계약 체결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가센터장은

- 앞으로 전기공사 발주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나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통보

제 목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배부 민간위탁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경기도 가국 (나과)  
조 치 기 관 경기도 가국 (나과)  
내 용

### 1. 업무 개요

나과는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2023. 2. 14.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민탁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sup>35)</sup>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 시의 책임, 지도·점검, 성과평가

35)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 2024년 사업계획서 승인 소홀

나과는 협회와 2023. 2. 14. “경기도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배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전년도 12월말까지 “도”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나과는 협회가 작성한 2024년 사업계획서를 2023. 12월 말까지 승인 하고 협회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나과는 협회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협회는 승인된 사업계획 없이 위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나과는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없어 사업관리가 부실화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민간위탁 사업 물품관리 소홀

계약서 제10조에 따르면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관련 법령과 “도”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도”는 위탁 사무와 관련한 계약 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협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는 협회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고,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르면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 관리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과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협회는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로 설치한 내구성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을 준수하여 물품 관리를 하여야 하고, 나과는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지도·점검 시 정기 재물조사 등 협회의 공유재산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나과는 협회가 내구성 물품인 배포대 167개를 내구성 물품으로 인지하지 않고 일반 소모품으로 관리하여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기 재물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등 공유재산법에 따른 물품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지 않음에도 2023. 6. 22., 2023. 11. 24. 상·하반기 지도·점검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나과는 협회가 설치되지 않은 배포대를 기준 없이 교체하거나 교체 연한이 지난 배포대를 방치하여 보조금이 낭비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물품대장 작성, 재물조사 실시 등 물품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감독할 계획이며, 향후 위·수탁계약서에 근거하여 보다 철처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나과장은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라며, ○○협회가 “경기도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택자 제작 배부 사업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2024년 운영계획서를 승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을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3	감사자	○○○○☆급 ○○○		공 개( ○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나과 (가과,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주의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다실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다실 (가과, 나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 연구용역” 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나과는 평가결과에 따라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 연구 용역」 계약체결 현황 “생략”

####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전문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장 제4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36)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 등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업체에서 재직하는 등 다음 각호3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예비 평가위원 명단에서 입찰참가 업체와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제척대상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평가위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가과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진행 과정은 [표 2]와 같다.

#### [표 2]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진행 과정 “생략”

- 
- 36)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과는 202△. △. ▲▲. 가과로부터 전달받은 예비 평가위원 명단(소속, 이름 등 포함)에 입찰참가 업체(△△△)와 같은 소속의 ●●● 위원(제척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배제하지 않고 입찰참가자(△△△, ㉡㉡㉡)에게 평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평가위원 추천결과 ‘△△△’에 재직중인 ●●● 위원(제척대상)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 위원을 포함한 총 9명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가과에 송부하였다.

또한 가과는 202△. △. ▲▲. 입찰 참가업체(△△△, ㉡㉡㉡)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척 대상인 ●●● 위원을 배제하지 않고 [표 3]과 같이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202△. △.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 위원의 평가점수를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반영하였다.

**[표 3] 「○○○○○○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생략”**

그 결과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가과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가과, 나과는**

-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나과, 라과 (나과, 라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 주의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규정 미준수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나과), 경기도 다국(라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가국(나과), 경기도 다국(라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국 나과(이하 “나과”라 한다)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 □□□ □□□□ □□□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업무를, 경기도 다국 라과(이하 “라과”라 한다)는 「경기도 ○○○ ○○○ ○○○○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 ○○○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낙찰자 결정 기준”이라 한다.) 제7장-제3절-4.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표 1]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li> <li>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li> <li>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li> <li>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li> <li>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정성적 평가 분야	용역 ·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li> <li>지원기술·사후관리</li> <li>상호협력 관계</li> <li>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위원이 평가</li> </ul>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자료: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발체

따라서 나과 및 라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나과 및 라과는 제안서 평가 시 [표 2]와 같이 정량적 평가 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30%)인 6점을 일부 초과하여 배점하고 평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업

무 추진 시 행정안전부 예규(낙찰자 결정기준)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정량 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30%) 초과 현황

연번	부서명	계약명	정량평가 전체배점 (A)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A×30%)	정량평가 항목별 실제 배점	비고
1	나과	□□□□□□□ □□□□ □□□ □□□□ 사업 운영 용역 수의계약 (2023. 2월 ~ 12월)	20	6	▪경영상태(2) ▪신인도(2) ▪실적(10) ▪인력현황(6)	배점한도 초과
2	라과	○○○ ○○○ ○○○○ ○○○○ ○○ 연구용역 (2023. 2월 ~ 9월)	20	6	▪참여인력경력(8) ▪수행실적(7) ▪경영상태(3) ▪신인도(2)	배점한도 초과

자료: 해당 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 및 라과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과장 및 나과장은**

-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업무 추진 시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가과, 나과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주의 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결과 미공개  
소관기관(부서) 가국 가과, 나국 나과  
조치기관(부서) 가국 가과, 나국 나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가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에 따라 본청 계약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나과는 ○○○원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과와 나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사업부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따르면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



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나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사업부서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그 결과인 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sup>38)</sup>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표 1] 제안서 평가결과 미공개 현황(생략)

그런데 가과, 나과는 [표 1]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와 나과는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가과장, 나과장은

-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38) 해당 입찰공고문을 게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

일련번호	1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나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기 도 개선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미비  
소관기관(부서) 경기도 가국(나과)  
조치기관(부서) 경기도 가국(나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경기도 가국 나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르면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낙찰자 결정 기준”이라 한다) 제7장-제5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고 되어 있고,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7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원회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통계청은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정족수 미달 시에는 위원회를 연기하고,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에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취소·연기된 경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경기도 다과(이하 “다과”이라 한다)에서 「2022년 □□□ □□□□□□ 운영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2022. 3. 24.) 평가위원들이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여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취소되었고, 이후 2022. 3. 30.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당초 평가위원회와 동일한 위원 명부를 구성한 후 회의방식만을 기존의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변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나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취소·연기될 경우 지방계약법 등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평가위원회의 진행 절차(평가위원회 연기, 예비 평가위원에 대한 고유번호 재부여 후 새로운 평가위원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방지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을 개정(2023. 8. 28.)하여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위원 지정수를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전염병 유행 등의 사유로 당일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연기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계약추진을 위해 현행 세부 기준을 보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나과장은

-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취소·연기될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계약법 등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선)